

# 민주당 성토장 된 '초월회' 정개·사개특위 합의 비판

### 손학규 "심상정 빼다면 대신 연동형 비례제 담보해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문희상 의장 주최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80여일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 여야 5당 대표들이 상당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들은 1일 낮 12시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의 '초월회' 모임에 참석해 국회 정상화 현황과 진남 진행된 남·북·미 정상회담 3자 회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모두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상대측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를 보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달 28일 합의가 원내 1, 2당 중심으로 타결됐다고 지적하며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했던 민주당을 향한 성토를 쏟아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처리해야 할 현안은 산적한 반면 가까스로 정상화된 임시 국회의 회기는 18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애초 합의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한국당은 예결 위원장을 비롯해 (교체할) 상임위원장을 신속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법안 심사가 가능해진다"고 요청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달 동안 국회와 우리나라 상황을 돌아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가 지난 3월 초월회에 처음 참석한 자리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력이 이뤄질지 바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불분명치가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난다"며 "오늘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손 대표는 "기왕에 원내 1, 2당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상정 위원장으로부터 뺐다면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그것을 심상정 위원장에게 다시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 주길 정중히 요구한다"고 제언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저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시대 최고 개혁은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 국회가 표류하고 공전 한 번 했지만 정상화되는 마당에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사실상 무력화, 실종된다면 정상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문 의장이 강조하는대로 20대 국회가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고 역사에 남으려면 반드시 선거제 개혁, 정치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해찬 대표는 이미 말씀했고 저희 당은 이걸 계속 주장하고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손학규·이정미 대표가 함께하면 5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이견이 없게 되는 셈"이라며 "20대 국회가 정치개혁과 더불어 국민 80%가 지지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이뤄낼 결정적 시기"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요 근래 의회 민주주의가 뒤흔들릴 수 없는 며칠이었다. 국회를 정상화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주의가 다수의 지배라 하지만 최대 다수 의견을 만들어내기 위한 합의 과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원칙이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뿐만 아니라 발목잡기가 협치보다 우선하고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며 "협 상임위원장을 당사자는 물론 해당 정당에 양해 없이 교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상대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비정상적인 국회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문 대통령 지지율 47.6% 한국당 국회 파행 책임론에 중도층 지지 늘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후반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 책임론으로 중도층 지지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실시한 6월 4주차(6월 24~28일) 주간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0.9%포인트 상승한 47.6%(매우 잘함 24.9%, 잘하는 편 22.7%)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7%포인트 내린 47.8%(매우 잘못함 31.8%, 잘못하는 편 15.8%)를 기록해 긍정평가보다 1.2%포인트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0.2%포인트 감소한 4.8%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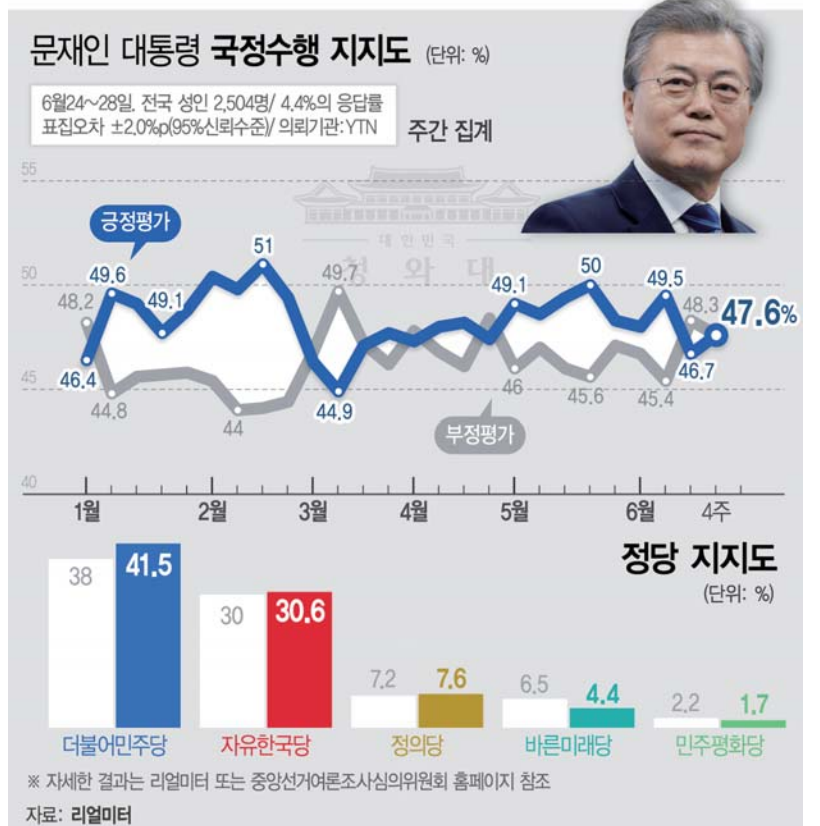
지난주에는 북한 어선 산적함 임항 관련 논란과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 등 지지율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에 제기된 국회 파행 장기화 책임론은 문 대통령이 중도층 지지세를 회복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중도층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4.9%포인트 상승한 46.7%를 기록했다.

또 ▲대진·세종·충청(39.5%→43.6%, 부정평가 52.9%) ▲경기·인천(49.7%→52.9%, 부정평가 42.6%) ▲50대(40.9%→44.6%, 부정평가 50.9%) ▲30대(51.2%→54.5%, 부정평가 39.8%) 등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36.0%→29.1%, 부정평가 68.8%) ▲광주·전라(67.9%→64.9%, 부정평가



30.3%) ▲20대(49.5%→46.8% ▲ 부정평가 48.9%) ▲보수층(20.3%→18.8%, 부정평가 78.5%)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 北어선 논란·G20 참석 공·부정 요인 '혼재' 중도층 41.8→46.7%

리얼미터 관계자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중도층에서 상당 폭 올랐는데 그 동안의 국회 파행으로 중도층이 한국당에서 민주당 쪽으로 쏠린 것과 맥을 같이 한다"며 "주말에 있었던 남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회동 영향은 반영되

지 않았으나 G20 정상회의 관련 보도량이 증가한 것은 반등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유권자 5만7406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04명이 응답을 완료해 4.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 “트럼프, 北에 완전한 경제제재 해제·체제보장 약속”

### 박지원 “북미 모두 호랑이등에 타...떨어지면 죽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경제 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을 약속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다음 실무 단계로 넘어갔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같이 말한 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합

의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북미 관계에 대해) 항상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도 이 이상의 경제 제재 압박을 견딜 수 없고 미국도 이 이상 북한에게 시간을 주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견딜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은) 호랑이

등에 탔다. 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죽는다”면서 “그런데 두 정상 모두 고수이기 때문에 살 길을 ‘인원’ 하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김 위원장에 대해 “36살의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전 세계의 대통령인 미합중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대등하게 이끄러가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분이라고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행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